

OECD DAC의 독일에 대한 동료검토 주요내용 및 시사점

(2021. 6.)

경협총괄부 정책분석소팀

‘21. 6월 OECD DAC는 독일에 대한 동료검토를 완료하였다. 금번 동료검토에서는 ‘15년 이루어진 동료검토 권고사항 14개 중 이행 3개, 부분이행 11개로 평가하였다. 또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, 비전 및 전략, ODA 현황 및 재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거 권고사항 부분이행 건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. 본 보고서에서는 동 내용을 정리하고,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.

【 목 차 】

1. 개요

2. 주요 내용

가. 종전 권고사항 이행여부

나. ‘21년 권고사항

다. 분야별 점검

- 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
- ② 정책 비전 및 전략
- ③ ODA 현황 및 재원
- ④ 조직구조 및 시스템
- ⑤ 지원수단 및 파트너십
- ⑥ 성과관리·평가·환류
- ⑦ 취약국 및 인도적 지원

3. 시사점

1. 개요

- OECD DAC는 2개 회원국(벨기에, 네덜란드) 대표와 독일에 대한 동료검토*를 실시하고, 최종 보고서를 발간('21. 6. 9자)

* OECD DAC는 개발협력 관련 정책·시스템의 질적개선 및 효과성 향상, 지속가능개발 및 빈곤 감축을 위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증진 등을 위해 동료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시행현황 등을 4~5년 단위로 점검

- 종전('15년)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, 독일의 개발협력 전반을 점검하여 새로운 권고사항(10건)을 제시

- (정치·경제적 환경) '05년 이후 기민당(Christian Democratic Union) 메르켈 총리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토대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,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유지

- 그러나 '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악화로, GDP가 5.5% 감소하고, GDP 대비 재정수지가 6.3% 악화

- 다만, 코로나19 이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였던 바, 팬데믹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, '20년 국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ODA 증여등가액은 전년 대비 증가 ('19년 242억불 → '20년 284억불(잠정))

- '20년 기준 ODA 규모는 증여등가액 기준 284억 달러(잠정)로 DAC 회원국 중 상위 2위 수준이며, ODA/GNI 비율은 0.73%로 목표(0.70%) 대비 초과 달성

<'20년 주요 DAC 회원국 ODA 현황(증여등가액 기준, 잠정)>

단위: 백만 달러(명목환율 기준)



- (추진체계)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가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, 감독하고 있으며, 그 외 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(분쟁, 긴급구호 등)는 외무청(Federal Foreign office)이 담당

- ODA 실행기관으로써 금융지원은 KfW 개발은행, 기술원조는 GIZ가 담당하고 있으며, 개도국 내 민간부문 금융지원은 KfW 그룹의 자회사인 DEG가 담당

2. 주요 내용

가. 종전 권고사항 이행여부

□ '15년 동료검토시 도출된 권고사항 14건 중 3건 이행, 11건 부분이행으로 평가

권 고 사 항	이행여부
1. 개발을 위한 포괄적 노력(Comprehensive Development Effort)	
<p>(1) <u>독일정부는 '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' 조정(update) 시 국내·외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시하고, 정책 일관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</u> ✓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독일은 '02년 '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'을 수립한 이후, SDGs를 반영하기 위해 '16년까지 동 전략을 조정(update)키로 결정하였음. 이 과정에서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는 모든 정부 정책이 개발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함.</p>	△
2. 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(Vision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)	
<p>(1) <u>독일 정부의 '미래 헌장*'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'운용프레임워크화'할 것</u> * Charter for the Future : BMZ '14년 발표,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정부 개발정책의 비전, 기본 전략 등을 담고 있음.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개발목표는 명확한 지침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</p>	○
<p>(2) <u>"ODA 자원 및 개발 수단 배분 기준"이 "개발 정책"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</u>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배분 기준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 : 독일 정부는 '양호한 거버넌스'를 양자 자원 배분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,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국(거버넌스 약함) 중심의 원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, 모순적</p>	○
<p>(3) <u>BMZ는 양성평등을 포함한 범분야 이슈에 적극 대처하되,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, 자원 및 수단도 적절히 지원할 것</u> ✓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여러 가지 범분야 이슈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,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. 이중 양성평등의 경우 독일정부 내 중요도가 높음.</p>	△
3. 원조자금의 배분(Allocating ODA)	
<p>(1) <u>국제사회의 ODA/GNI 목표 0.7% 달성을 위한 시기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</u>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독일정부는 '14~'19년간 103억 유로의 원조자금 증액을 발표하는 등 UN 목표인 ODA/GNI 목표비율 0.7%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시, ODA/GNI 비율은 0.4% 수준일 것으로 예상</p>	△
<p>(2) <u>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목표(2030년까지 ODA/GNI: 0.2%) 달성을 우선시할 것</u></p> <p>→ ('15 권고안 중) '13년 독일 양자지원의 27%만이 최저개발국 앞 배분, 73%는 중소득국 앞 배분되어 최저개발국 집중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함.</p>	△
4. 조직과 관리(Organisation and management)	
<p>(1) BMZ는 독일 개발협력에 대한 조정기능을 극대화할 것 - 의사결정시스템 간소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, 감독 기능을 촉진할 것</p>	△
<p>(2) BMZ는 원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, 원조의 질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</p>	△

✓ : '21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에서 재차 또는 유사한 맥락에서 권고한 항목

권 고 사 항	이행여부
5. 원조 실행 및 협력(Development Cooperation Delivery and Partnerships)	
(1) 프로그램 및 전략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별 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것 → ('15 권고안 중) 독일 예산체계상 다년도 사업 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BMZ는 그간 수원국에 중장기 ODA 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음. 이후 국별 전략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으나, 실제 이행은 절반 이하 수준	△
(2) 여타 개발협력 파트너와 함께 수원국 시스템 활용도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✓	△
(3) 시민사회 지원을 통한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BMZ는 다년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 ✓ → ('15 권고안 중) 독일은 ODA(net)의 8%를 직간접적으로 NGO앞 제공하는 등 시민사회 지원에 적극적이거나, 소규모 프로젝트성 지원이 상당수를 차지,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	△
6. 성과관리와 책무성 강화(Results and Accountability)	
(1) 의사결정 개선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결과기반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것 ✓ → ('15 권고안 중) KfW, GIZ는 결과기반 시스템을 근거로 원조 기대효과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, BMZ의 경우 개별사업 성과를 취합하여 이를 정책, 기획, 예산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미비	△
(2) BMZ는 평가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해볼 필요 - 프로그램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들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포함 ✓	△
7. 인도적 지원(Humanitarian Assistance)	
(1) 통합적인 독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, BMZ의 전환 지원*과 특별 이니셔티브**의 운용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✓ → ('15 권고안 중) 독일의 인도적 지원은 통상 외무청(Federal Foreign Office)에서 담당하되, BMZ의 전환적 지원과 특별 이니셔티브가 일부 보완 * 분쟁 및 재난 관련 인도적 지원(식량안보, 이주민 재통합 등) ** 기아(Hunger), 기술훈련·고용창출(Training and Employment)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	○

✓ : '21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에서 재차 또는 유사한 맥락에서 권고한 항목

나. '20년 권고사항

- 분야별 점검 후 종전 권고사항의 이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의 신규 권고사항 제시

권고사항		관련 분야별 점검 항목
1	지속가능개발 전략(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)을 통해 국내 및 유럽 정책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일관성 있도록 유도 · 현재 적용중이거나, 추진 중인 정책 및 지침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 ·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략에 포함하고, 이와 관련한 각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역할 명시 · 상기 작업의 시행, 점검, 결과보고 철저	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
2	BMZ가 개발협력을 주도하고, 전략목표('2030 Reform strategy')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· 모든 부처를 관통하는 독일 개발협력의 명확한 비전 제시 · 절차개선을 통해 내부 관료주의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	② 비전 및 전략 ④ 조직구조 및 시스템
3	성평등에 대한 지원강화, 관련 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필요	② 비전 및 전략 ③ ODA 현황 및 자원
4	빈곤축소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스 구체화,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	② 비전 및 전략
5	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성과기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	⑥ 성과관리·평가·환류
6	수원국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, 국가별, 지역별,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 및 환류 강화	⑥ 성과관리·평가·환류
7	취약국 지원에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BMZ와 외무청은 · 공동으로 계획, 분석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, · 모든 사업에 대해 분쟁취약성, 인도주의·개발·평화 넥서스가 고려 되도록 명시	⑦ 취약국 및 인도적 지원
8	비공식 문서,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원국의 언어 사용을 극대화하여 직원들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	④ 조직구조 및 시스템
9	수원국 현장으로 책임과 권한 이양	④ 조직구조 및 시스템
10	국별전략 수립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목적을 명시하고, 여러 개발협력 파트너의 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	⑤ 지원수단 및 파트너십

다. 분야별 점검

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

- **(대외적/대내적)** 대외적으로 정상회담* 등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를 유도하고, 대내적으로는 총리 주도로 지속가능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·감독·제언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속가능개발 전략('21.3월)** 등을 추진

* '15년 엘마우(Elmau) G7 정상회의(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아젠다 마련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조), '17년 함부르크(Hamburg) G20 정상회의(미국을 제외한 G20개국의 파리협정 이행의지 재확인, '16년 합의된 'SDGs 달성을 위한 G20 액션플랜' 구체화) 등

** 6가지 핵심부문(①개인의 삶의 질, 능력, 사회정의, ②에너지, 기후보호, ③순환경제, ④지속가능한 건물 및 교통, 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시스템, ⑥오염없는 환경)에 대한 이행 강조

- 또한 '공평한 무역, 지속가능한 세계화 달성'을 목표로 글로벌 밸류체인(value chain) 개선, 코로나19 백신 등 글로벌 공공재 지원, 난민수용 및 사회통합 지원 등 다방면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

- **(정책 일관성)** 지속가능발전위원회*를 통한 정책조율, 모든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는 등 SDGs에 상응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

* 모든 부처에서 참여하는 고위급 포럼으로, 총리가 의장의 역할 수행(State Secretaries' Committe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)

- 그러나 분권적인 정치체계, 연방 부처간 독립적 문화 등으로 여러 부처와 연관된 정책일수록, 정책과 SDGs간 충돌을 파악·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,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장기간 소요

→ 현재 적용 혹은 추진 중인 정책 및 지침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공식적이고, 단일화된 조정 매커니즘 부재

'15년 권고사항 ①	평가	권고사항 ①
지속가능개발 전략을 통해 국내외 정책일관성 제고하고, 이를 모니터링	부분 이행	지속가능개발 전략을 통해 국내 및 유럽 정책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일관성 있도록 유도 (철저한 분석점검결과보고, 부처간 역할명시 등)

- **(인지도 제고)** 정부의 개발협력 관련 교육지원 확대('15년 25백만 유로→ '20년 45백만 유로) 등으로 국민들의 개발협력 인지도는 여타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나, 실제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

- 개발협력에 대한 설문조사시 약 90%의 국민들이 개발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데 반해, 참여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독일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,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(Development Engagement Lab)

② 비전 및 전략

□ (비전) 개발협력 전담부처인 BMZ의 '2030 개발정책('18년)'이 존재하나, 법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비전은 부재

- '2030 개발정책'은 '14년 미래헌장(Charter for the Future)을 재정비한 것으로, 빈곤퇴치, 2030년 SDGs 달성 및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, 전략적 방향을 제시

'15년 권고사항 ②-(1)	평가
미래 헌장'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' 운용프레임워크化'할 필요	이행

- 현재 BMZ 外 13개 연방부처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에 따라 ODA를 자체적으로 실시
- '18년 獨 연립정부는 BMZ의 '2030 개발정책'에서 제시된 4개의 특별 이니셔티브*를 중심으로 한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나, 동 정책은 여전히 BMZ 차원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

* ①하나의 세계_빈곤탈출, ②난민발생 방지 및 정착 지원, ③중동·북아프리카 지역(MENA)의 안정 및 개발, ④기술훈련 및 고용창출

권고사항 ②-1
BMZ가 개발협력을 주도하고, 전략목표('2030 Reform Strategy')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를 관통하는 독일 개발협력의 명확한 비전이 필요

- 예외적으로, '17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"Compact with Africa" 이니셔티브*의 경우 연방정부의 "對아프리카 정책 가이드라인('19년)" 제정 등을 통해 각 부처간 아프리카 지원계획의 일관성을 제고
- * 아프리카 지역 민간,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, 삶의 질 개선,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참여국은 베냉, 부르키나파소, 코트디부아르 등 12개국임.

□ (지침 및 가이드스) 국제환경(빈곤 지속, 기후변화, 세계화, 디지털화), 2030년 SDGs 달성을 위한 효율적 ODA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BMZ는 '2030 Reform Strategy' 발표('20년 시행)

- (주요 내용) 중점지원국 축소(85 → 60개국), 협력국의 전략적 구분(양자 파트너, 글로벌 파트너, 넥서스·평화 파트너), 중점지원분야 조정(11개→ 5개*), 모든 사업에 대해 6개의 질적기준** 측정 등

* ①평화, 포용적 사회, ②빈곤퇴치, ③기술훈련 및 고용창출, ④기후 및 에너지, ⑤환경 및 천연자원

** ①인권, 성평등, 장애인 포용, ②반부패, 통합, ③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, ④환경 및 기후영향평가, ⑤분쟁취약성, ⑥디지털 기술

- 특히, 정부의 "Compact with Africa"에 맞춰, 양자 파트너 중 지원확대가 필요한 국가("reform partner")로 아프리카 6개국을 명시

< BMZ의 '2030 Reform Strategy' 협력국 구분 및 구성 >

협력국 구분 (총 60개국)	양자 파트너 (42개국)	글로벌 파트너 (8개국)	넥서스·평화 파트너 (10개국)
내용	공통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협력 추진	기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	분쟁 등 위기국 대상으로 안정, 평화구축 지원
국가	· 일반(29) : 아프가니스탄 등 · reform partner(6) : 코트디부아르, 에티오피아, 가나, 모로코, 세네갈, 튀니지 · transformation partner(7) : 알바니아, 조지아 등	브라질, 인도, 인니, 멕시코, 페루, 남아공, 베트남, 중국	중앙공, 차드, 콩고민주공화국, 이라크, 리비아, 소말리아, 남수단, 시리아, 예멘

- 다만, 중점지원 분야 및 질적 기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추진, 적용, 모니터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은 부재
- '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'는 질적 기준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나, 일부 사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, 동 목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등 사업별로 비일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

'15년 권고사항 ②-(3)	평가	권고사항 ④
양성평등을 포함한 범분야 이슈에 적극 대처하되,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, 자원 및 수단도 적절히 지원할 것	부분 이행	개도국의 빈곤축소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선 구체화,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

- **(의사결정 방식)** 분야별,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양자 ODA 및 기술협력이 추진되며, 일반적으로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
- **(다자협력)** BMZ의 다자협력 전략*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우선순위 반영을 최종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는 등 다자차원의 협력이 양자 지원전략과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

* BMZ strategy for a strong European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('21. 4월)

③ ODA 현황 및 재원

- (ODA 목표 및 현황) '20년 증여등가액(잠정) 기준 ODA 규모는 전년(242억 달러) 대비 13.7% 확대된 2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ODA/GNI 비율은 0.73%로, 목표(0.7%) 대비 초과 달성*

* DAC 회원국 중 ODA/GNI 비율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국가는 독일 포함 6개국에 불과함. 한편, 독일은 '16년에도 목표수치를 달성한 바 있음.

- '10년 이후 ODA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, '16년부터 총 ODA 규모는 200억불 이상(총지출 기준)을 기록, OECD DAC 회원국 중 상위 2위 수준을 유지
- 특히, 전체 ODA에서 양자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(총지출 기준, '10년 62% → '19년 79%)되었는데, 이는 다자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확대에 기인

<독일의 주요 개발협력 지표>

단위: 백만 달러(명목환율 기준)

구 분	증여등가액 기준			총지출 기준
	2018	2019	2020(잠정)	2019
ODA	24,977 (100%)	24,198 (100%)	28,405 (100%)	26,901 (100%)
양자	18,765 (75%)	18,581 (77%)	21,966 (77%)	21,284 (79%)
다자	6,212 (25%)	5,617 (23%)	6,439 (23%)	5,617 (21%)
* ODA/GNI	0.61%	0.61%	0.73%	-

- GNI 대비 최저개발국 앞 ODA 비율은 0.11%('19년 순지출 기준, 양·다자 합계)로 이스탄불 행동계획(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LDCs)에서 공약한 0.15% 미만 수준
- OECD DAC 권고에 따라 최저개발국 및 고채무빈곤국 앞 지원은 100% 비구속성 조건으로 제공 중
 - '17~'18년 승인액 기준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86%(OECD DAC 평균 79%)이며, 비구속성 사업의 자국기업 수주 비율은 약 21%(금액 기준)로, 비구속성 지원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
 - 다만, 비구속성 사업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는 미흡

□ 양자 ODA의 배분

- (국가별·지역별) '19년 총지출 기준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은 약 36%이며, 특히 'reform partner'로 구분되는 아프리카 6개국은 16%를 차지
- 그 외, 아시아 26%, 중동 19%, 중남미 11%, 유럽 8% 순

- **(소득그룹별)** '19년 총지출 기준, 하위중소득국(LMIC) 앞 지원비중은 44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 상위중소득국(33%), 저소득국(23%) 順
- 최저개발국(LDC) 앞 지원규모는 확대('15년 18억불 → '19년 27억불)되었으나, 상위 20개 수원국 중 최저개발국은 2개국(아프가니스탄, 예멘)에 불과
- BMZ "2030 Reform Strategy"의 중점협력국 중 LDC에 해당하는 국가 수가 줄어든 점(△8개국)을 감안할 때 향후 동 소득그룹 앞 지원비중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

'15년 권고사항 ③-(2)	평가
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목표('30년까지 ODA/GNI: 0.2%) 달성 우선시	부분이행

- **(부문별)** '18~'19년 승인액 기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5%,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9% 順
- '18~'19년 기준 배분가능한 양자 ODA(bilateral allocable aid)에서 '성평등, 여성의 권리신장' 관련 지원 비중은 42%로, OECD DAC 평균(45%)과 유사한 수준이나, 동 주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2%에 불과

권고사항 ③
성평등에 대한 지원강화, 관련 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필요

- '환경 및 기후변화' 관련 지원 비중은 49%이며, 기후변화*만 고려할 경우 완화 20%, 적응 13%, 완화 및 적응 9%로 구성
- * 기후금융의 약 50%는 아프리카 내 지원
- **(지원형태별)** 총지출 기준 양자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'18~'19년 평균 23%이며, 양허성 차관 지원대상국은 중소득국이 90% 이상으로, 대부분을 차지
- 양허성 수준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, 지원분야(혹은 사업)의 특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양허성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
- 한편, 중소득국의 기술협력에 대한 수요확대로 기술협력 지원규모(GIZ 전담)는 '15년 17억불(무상지원의 14%)에서 '19년 28억불(16%)까지 확대
- **(다자성 양자)** '19년 총지출 기준 양자 ODA의 18%(38억불)는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(non-core support, 용도지정)하고 있으며, KfW 재원을 활용하여 다년(multi-year)간의 지원계획을 승인하는 등 지원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

- **(다자원조 배분)** 다자 ODA(core support) 규모는 '19년 총지출 기준 56억불로, 전체 ODA의 21%를 차지하며, 주요 다자협력체는 EU('19년 33억불)
- **(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마련)** 혼합금융, 개도국 국내자원동원(Domestic Resources Mobilisation, DRM) 지원 등 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, '20년부터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(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, TOSSD) TF의 옹저버로 활동 중
 - 2017~19년 연평균 KfW, DEG 등을 통한 독일의 민간재원 동원규모는 721백만불이며, 대부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원
 - DEG를 중심으로, 개도국 민간기업 앞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'18~'19년간 DEG의 지원규모는 대출(OOF) 25억 유로, 지분투자(ODA) 822백만 유로 기록

④ 조직구조

- **(승인·권한·조율)** BMZ가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, 감독하고 있으며, 집행은 다양한 기구와 타 부처, 연방 주정부, NGO 등이 담당*
 - * '18~'19년, BMZ 50%, 외무청 12%, 13개 부처 19%, 16개 연방 주정부 5% 등(총지출 기준)
 - ODA 예산을 늘리는 등 최근 5년간 BMZ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각 부처와 연방 주정부가 각자의 ODA 예산, 정책,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BMZ가 일원화된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
 - BMZ의 범정부적인 조정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BMZ의 '2030 Reform Strategy'에 따라 중점지원국 수가 감소하여 명확한 커뮤니케이션, 투명성 및 대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

'15년 권고사항 ④-(1)	평가
BMZ는 독일 개발협력에 대한 조정기능을 극대화할 것	부분이행

- KfW(금융지원), GIZ(기술협력), PTB(측량연구)*, BGR(지질·자원연구**)과 같이 전문성을 보유한 4개의 집행 기관이 상호 보완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, BMZ와 각 기관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편
 - * Physikalisch-Technische Bundesanstalt (National Metrology Institute)
 - **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
- **(절차·시스템)** 독일은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BMZ는 더 빠르고 유연하며,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
 - BMZ는 '18~'19년 사업절차 개선을 통해 기술·금융협력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

- 기존에 모든 신규 사업은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던 반면, 최근 의회는 이를 완화하여 특수한 경우에만 체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(정부간 협정 80% 감소 전망)
 - '20년 도입된 통합 계획·할당 시스템은 여러 예산처에서의 예산 사용을 통합하여 계획하고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중점 분야나 지역, 특별 이니셔티브,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예산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
 - BMZ와 집행기관들은 포괄적이고 견고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국가, 포트폴리오, 사업 레벨에서 위험을 평가하고,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함.
 - 독일은 OECD DAC 반부패(Anti-Corruption)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등 부패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
 - 독일은 개발협력 전반에 걸쳐 혁신(innovation)과 디지털화를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, BMZ는 디지털화의 주류화를 목표로 신규 부서와 전략 수립
- (역량) 폭넓은 원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대외적인 평판이 우수함. 대부분의 인력이 본점에 집중되어 있음.

<독일의 개발협력 인력>

기관	총직원	본점근무	재외공관·현지 사무소 파견	재외공관·현지 사무소 현지직원	'15년 대비 직원수 변화
BMZ	1,210	1,005	128	n/a	27%
GIZ	22,199	4,543	2,536	15,120	33%
KfW	1,237	828	79	330	24%
합 계	24,646	6,376	2,843	15,450	평균 28%

- '15년 대비 BMZ의 재외공관 앞 파견자 수가 증가*하였지만, '10년 및 '15년 동료 검토에서도 권고된 독일 개발협력 분권화 진행은 아직 더딘 상태

* BMZ 총 직원 1,210명 중 본점 근무 1,005명,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128명('19년 기준)

- BMZ 본점에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며, 해외 파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은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높은 거래비용과 비효율성을 발생시킴
- 수원국 현장으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원국의 요구에 더욱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

'15년 권고사항 5-(2)	평가	권고사항 ⑨
여타 개발협력 파트너와 함께 수원국 시스템 활용도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	부분 이행	수원국 현장으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할 필요

- GIZ와 KfW 해외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되며, 이들에게 독일어 사용이 문서와 훈련, 커뮤니케이션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. 비공식 문서에서 수원국의 언어 사용을 최대화하면, 현지 직원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협력이 가능

권고사항 ⑧
비공식 문서,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원국의 언어 사용을 극대화 하여 직원들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

- BMZ의 연수 예산은 지난 5년간 34% 증가하는 등 직원 앞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, 유연한 근무배치와 해외파견자 배우자를 위한 패키지를 제공 중

⑤ 지원수단 및 파트너십

- (파트너십)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가 있으며, 특히 EU 공동 프로그램(joint programming)*, 삼각협력(triangular co-operation)**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자주의 적극 지지

*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대하여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, EU와 회원국 공동의 개발목표와 각자의 지원분야, 지원규모 등을 포함함.

** 개도국의 개발에 2개의 공여국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, 독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중 하나

- 정부 부처 및 연방 주정부 뿐만 아니라, 시민사회 단체(CSOs)가 개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교회기반 단체와 정치단체, 연구·평가기관, 민간 파트너 등이 참여하고 있음. 독일은 이들 비정부단체들을 더욱 활용할 필요
 - 시민사회 앞 ODA 예산 비중(8% 수준)은 증가하였지만, OECD 평균인 15%를 하회함. 시민사회 앞 예산 규모를 늘리고, 더욱 효율적인 지원절차를 수립할 필요
 - '15년 동료검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 지원을 통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년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

'15년 권고사항 ⑤-(3)	평가
시민사회 지원을 통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BMZ는 다년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	부분이행

- 독일은 민간부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, 민간부문은 BMZ 및 외무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.
 - 민간참여 사업은 통상 3년 기간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왔으나, 보다 장기적인 사업도 지원해야 하며, 신재생에너지, 디지털화,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잘 활용할 필요

- 독일은 EU 공동 프로그램 총 사업의 85%에 참여하고 있으며, EU 국가 중 1위임. 또한 다자기구와 다수의 협조용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삼각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자주의 지지
- 독일은 IATI에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, 그동안 9,000여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시킴.

□ **(국가단위의 협력)** BMZ 내부적으로 국별 전략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,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 목적과 내용을 강화하여 수원국 앞 통합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함

- 타 부처, 연방 주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은 국별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EU 공동 프로그램 참여 내용 또한 전략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

권고사항 ⑩
국별 전략계획 수립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 목적을 명시하고 여러 개발협력 파트너의 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
⑥ 성과관리·평가·환류

□ **(개발성과 관리)** BMZ의 개발정책과 ‘2030 Reform Strategy’는 2030년 SDGs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, 수원국 정부 우선분야와의 일치성을 강조

- ‘2030 Reform Strategy’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5가지 중점지원분야* 및 10가지 이니셔티브**를 명시

* ①평화, 포용적 사회, ②빈곤퇴치, ③기술훈련 및 고용창출, ④기후 및 에너지, ⑤환경 및 천연자원

** ①아프리카 마셜플랜, ②보건/팬데미 대응과 공통의 보건지원, ③지속가능한 공급체계, ④인구 개발과 가족계획, ⑤디지털 기술, ⑥새로운 기회로의 회귀, ⑦개발과 기후의 연대, ⑧청정 에너지, ⑨합성 연료, ⑩스포츠/미디어와 문화

- 또한, 독일정부의 수원국별 프로그램은 각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명시된 중점 개발분야에 대한 독일정부의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을 명시

□ **(포트폴리오 중심의 성과관리)** 전통적으로 독일의 원조실행기관(KfW, GIZ)들은 사업발굴, 모니터링, 환류, 보고를 포함, 개별사업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실시해 왔으며, ‘17년 KfW 자회사인 DEG가 도입한 ‘개발효과성 측정시스템*’이 대표적

* 정성,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개별사업의 5가지의 중점성과(①고용창출, ②소득증대, ③시장조성 혹은 확대, ④환경에 대한 책무, ⑤공동체 앞 혜택)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(Development Effectiveness Rating, DERA)

- 그러나, 최근 들어 개별사업 성과관리에 그치지 않고, 해당 결과물을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, 사업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 촉진에도 활용

□ **(성과관리 개선 및 성과기반 평가문화 조성)** 다만, 독일정부의 개발협력 목표가 항상 측정 및 평가 가능하도록 수립되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

- 일례로, BMZ의 '2030 개발정책'의 경우, 글로벌 개발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,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상대적으로 미미
 - BMZ의 특별 이니셔티브 중 '기술훈련 및 고용창출'의 경우 목표(성과)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, 그 외 대부분의 전략 및 이니셔티브의 경우 구체적 실현목표(성과) 부재
 - BMZ가 주제별, 분야별, 국가 및 지역별 세분화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각각의 기대 성과와 이들 성과가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
- 더불어, 현재 BMZ의 '2030 Reform Strategy' 상에서 언급된 질적기준* 중 인권, 성평등 등의 경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. 따라서,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, 정량·정성지표 활용도를 확대하여 성과기반 관리를 제고할 필요
 - * ①인권, 성평등, 장애인 포용, ②반부패, 통합, ③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, ④환경 및 기후영향평가, ⑤분쟁취약성, ⑥디지털 기술

권고사항 ⑤
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성과기반 관리 체계적으로 실시

□ **(평가)** 독일정부의 평가 능력은 DAC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, 지속적으로 평가역량을 강화 중

- BMZ의 경우 현재 개발협력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
 - 자회사(지분율 100%) DEval(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)은 독일 개발정책, 목표 및 지원수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, '15년 동료평가 이후 기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
- KfW, GIZ의 경우 조직 내부(in-house)의 평가역량 강화에 지속 노력 중
 - GIZ의 경우, BMZ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(일부), 협조유자 사업, 대내외 위탁계약

사업들을 대상으로, 전략평가, 범분야 평가, 평가연구 등을 실시

- KfW의 경우, BMZ와 BMU(환경부)의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을 포함,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범분야 평가를 실시하며, 점차 주제별 평가도 확대 중

○ 즉, 현재 독일의 개발협력사업 평가는 복수의 기관을 통해 진행 중

- 비록, 조정 매커니즘이 부재한 것은 아니나, 특별 이니셔티브, 국별, 지역별,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

○ 독일정부의 평가기능은 독립적이나,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구체성이 부족

- 독일은 정책적 고려 등을 배제하고, 독립적으로 평가주제를 선정 중

- KfW의 경우 (i)외부 평가자, (ii)내부 직원의 경우 실제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

- GIZ의 경우 '18년 실증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변경, 평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

- 양 기관 모두 평가 결과는 경영진에 직접 보고

- 현재까지 DEval은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

- BMZ는 DEval 앞 예산을 배정(점차 확대 중)하고, 연간 평가 프로그램을 승인하고, 이후 DEval은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

- 당초 DEval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, DEval의 평가주제 선정 등에 있어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

- 다만, DEval 평가결과에 대한 BMZ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 필요

- 지금까지 DEval 평가결과에 대한 BMZ의 대응은 발견된 사실에 대한 비교적 소극적 (예: 발견된 사실을 환영)

-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함께 발표할 시, 평가가 보다 유의미

□ (환류) 독일은 분야별·주제별 지식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 중

○ 다만, 이와 같은 환류가 개별기관별로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, 다수의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개발협력체계를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

권고사항 ⑥

수원국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,
국가별, 지역별,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 및 환류 강화

⑦ 취약국, 위기관리 및 인도적 지원

A. 취약국¹⁾ 및 위기 지원

□ (기본입장) 독일은 주변지역 및 타 국가의 안정이 궁극에 본국의 치안과 사회 안정에 귀결한다는 입장으로, 취약지역과 취약국 평화유지에 적극적

- 동료평가 기간 중에도 독일정부는 취약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수립하고, 기존 정책 재정립에 노력
- 또한, 독일정부는 신규 승인목표 및 정책 이니셔티브 수립 등을 통해 취약국 지원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해 오고 있으며,
 - '20년 BMZ는 '전환적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*'을 별도로 수립하고, KfW, GIZ 역시 취약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음.
 - * BMZ가 경험적으로 시도해 온 위기관리 지원수단으로, 단순 생존을 평화로운 개발로, 인도주의적 지원을 장기적 개발 협력으로, 외부지원 의존 중심의 수원국이 자생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, 취약한 수원국이 복원력 있는 사회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'가교 역할'을 목표
 - 또한, BMZ의 '2030 Reform Strategy'에서는 중점협력국 중 넥서스·평화 파트너(10개국)를 별도로 구분하여 '취약성'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며,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질적기준(6개)에도 '분쟁취약성'을 포함

□ (지원현황) '19년 취약국 앞 지원금액은 양자 ODA의 23%(총지출 기준, 50억불)로 DAC 회원국 평균(33%)을 하회하나, 절대적인 금액은 DAC 회원국 3위 수준

- 특히, '19년 평화유지 지원 비용은 총 ODA 대비 3.46%로 DAC 평균(2.92%)을 상회하며, 인도주의 지원 비용(10.18%)과도 유사한 수준
- 또한, 취약국(아프리카 비중 53%) ODA의 31.6%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나, 독일 정부가 '아프리카 마셜플랜('17년)'에 따라 아프리카 지원시 무역·민간분야 투자·고용 창출 등에 주력함에 따라 실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11.2% 수준에 그침.

□ 프로그램 및 지원수단

- (전환적 개발지원) BMZ의 전환적 개발지원(Transitional Development Assistance, TDA)은 새로 도입된 수단은 아니나, 지난 동료검토 이후 정비, 연장되어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인 위기관리 수단 중 하나로 평가

1) '취약성' : the combination of exposure to risk and insufficient coping capacity of the state, systems and/or communities to manage, absorb or mitigate those risks(OECD, 'States of Fragility 2020').

- 또한, 난민이주(displacement) 이니셔티브*를 통해서도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개발 정책과 비중을 강조
- * BMZ의 '2030 개발정책'에서 제시된 4개의 특별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, 난민의 삶의 질 개선, 정착, 피난의 근본적인 원인해결 등을 지원내용으로 함.
- 전환적 개발지원을 위기상황에 조속히 투입함으로써, 외무청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

□ 효과적 이행과 파트너십

- **(다자시스템 활용)** 독일은 취약국 지원에 있어 다자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으며, 이들 기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여국
- 자금지원 외에도 위험을 적극 분담하고 정책협약에도 지속 참여해왔으며, '세계식량 프로그램(World Food Programme)', 'UN 어린이 펀드(UN children's Fund)' 등과 같은 파트너들과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
- **(EU 플랫폼 활용)** 독일은 EU 공동 프로그램(EU joint programming)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EU 내 공여국들과 협력
- **(인도주의·개발·평화 간 결합)** 독일은 DAC의 결합(Nexus)에 대한 제언*을 수용, 취약국 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와 개발, 평화유지 간 일관성·결합을 강화
- * DAC Recommendation on Humanitarian-Development-Peace Nexus('19. 2월)
- 독일은 '15년 동료검토 시 해당 분야 간 결합을 강화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음.

권고사항 ⑦
<p>취약국 지원에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BMZ와 외무청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으로 계획, 분석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, · 모든 사업에 대해 분쟁취약성, 인도주의·개발·평화 넥서스가 고려되도록 명시

B. 인도적 지원

- **(인도적 지원 전략)** 독일 정부(외무청)는 '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' 등을 통해 공언한 인도주의 지원액을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전략을 정비
- 인도적 지원은 평화와 치안에 대한 독일정부의 노력의 일환
- 독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수원국 수요와 이에 대한 국제기금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, 지난 동료검토 이후, 독일 정부의 인도적 지원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
- 다만, 인도적 지원의 경우, 항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바, 독일 정부는 UN과 등이 판단한 수원국 수요의 긴급성 및 지원 매커니즘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

- **(효과적인 프로그래밍)** 독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수요를 선행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된다는 특징
 - 일례로, 독일은 국제적십자연합 등과의 협력, 또는 연방외무청의 인도적 지원 관련 액션플랜 등을 통해 수요예측기반 자금지원을 처음 실시하였으며, 다자기구·NGO 협력을 통한 선행지원도 확대
- 또한, 독일은 인도적 지원은 상당 부분 직접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나, 최근 UN 펀드*(UN country based pooled funds, CBPF)를 통한 간접 지원이 증가
 - * 공여국들이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원조자금을 단일 펀드에 납입해두고, 수원국 내 인도적 활동단체 등에 수요가 발생할 시 적기에 집행
 - 이는 원조의 지역화(localisation)를 강조해온 독일정부 개발정책에도 합치
- **(효과적인 집행, 파트너십과 지원수단)** 독일정부는 수원국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
 - 일례로, EU 시민보호 매커니즘*을 적극적으로 지원, 활용하거나, NGO 지원을 통해 수원국 긴급상황에 조속 대응하고 재건을 지원
 - *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,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'01년 구성된 EU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간 공동 매커니즘
- 또한, 독일정부는 다자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, 다자채널을 통한 지원비중은 '15년 47%에서 '16년 69%로 증가한 이후 유사한 규모를 유지 중
 - 다자기구 중 UN을 통한 지원이 상당 비중을 차지

3. 시사점

-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바, 피 검토국은 각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권고사항을 선택적으로 이행
 - 독일은 직전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21%(3건)을 이행하고, 79%(11건)을 부분 이행하여 무난한 수준의 이행도를 보임.
 - * '10년 동료검토 시에는 39%(7건)을 이행, 61%(11건)을 부분 이행
 - 금번 동료검토 시 부분이행 평가를 받은 항목들의 상당수가 '원조정책의 일관성 강화', '원조기관간 기능 조정'을 비롯, BMZ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항
 - 또한, 1건 부분이행 사항(ODA/GNI 0.7%)의 경우, '20년 잠정통계 기준 달성된 것으로 파악

- 연방 체계이자 지방 분권화된 독일의 특성상, 원조 역시 연방정부(BMZ, 외무청, 환경부 등), BMZ 산하의 원조실행기관(KfW, GIZ), 16개 지방정부, 시 정부 등 다수의 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, 이 중 상당수가 자치적으로 원조를 제공 중인 바, 금번 동료검토 보고서는 '기관별 원조 기능의 조정'을 중요한 과제로 강조
 - 이에, 독일 정부가 원조정책 컨트롤타워인 BMZ의 역할을 점차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되며, 우리나라가 최근 국무조정실 ODA 조직 확대·개편을 통해 통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을 감안할 시, 향후 독일정부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을 것
- 또한, BMZ가 최근 신규 전략문서(2030 Reform Strategy)를 통해 SDGs 목표달성과 파리 기후협약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,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독일의 원조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.
 - 독일이 국제원조사회를 선도하는 공여국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, 우리 역시 독일 정부의 원조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'15년 독일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상당 수가 '17년 우리나라 동료검토를 통해서도 유사 권고*되었던 바, 금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평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'22년 아국 동료검토에 대비할 필요
 - * '(예) 조정기구(국개위)의 적극적 역할 / 수원국 정부와 파트너십 강화 /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대응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/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

<참고자료>

BMZ(2018), Development Policy 2030: New Challenges, New Solutions.
 BMZ(2020), BMZ priorities for a strong European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policy.
 BMZ(2020), BMZ 2030 Reform Strategy_New Thinking, New Direction.
 DEG(n.d.), Development Effectiveness Rating(DERa)_Brief Description.
 OECD(2021), Creditor Reporting System(database).